

제공일자	2013. 9. 2(월)	담당자	송윤아 연구위원	
홍보담당	김세환 부장(3775-9051)	연락처	3775-9025, 010-4111-4019	총3매

제목 : 보험연구원, 자동차보험 수리비 합리화방안 정책토론회 개최

- 보험연구원(원장: 강호)은 9월 3일 (화) 오후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「수리비 개선을 통한 자동차 보험료 합리화방안」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음.
- 민병두 국회의원과 보험연구원,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(사회: 류근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)에서는 운전자의 수리비 부담을 줄이고 자동차 보험료를 합리화할 수 있는 자동차 수리비 관련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대안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음.

Non-OEM 부품 활성화와 제조업체의 정비기술제공의무 강화 필요

-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첫 번째로 「자동차보험 수리비 개선 방안」을 주제 발표하였음.
- 평균 수리비가 262만 원으로 국산차의 3배를 넘는 외제차의 등록대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외제차 소유여부에 상관없이 전체운전자의 수리비 및 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.
- 외제차 수리비가 높은 이유로 독립정비업체의 OEM부품이나 정비기술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한, 딜러의 Non-OEM부품 취급 제한, 소비자의 부품 및 정비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한 실효경쟁부재를 지적하였음.
- 송윤아 연구위원은 운전자의 수리비 및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, Non-OEM부품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의 접근성 및 선택권을 확대하고 부품시장의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.
- 세부 실행방안으로는, 자동차제조업체 유통망과 독립유통망간 상호 거래에 대한 제한 완화

- OEM부품을 순정부품, Non-OEM부품을 비순정부품으로 표현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용어를 우선 정비
- 약관 개선을 통해 Non-OEM부품 사용을 공식화하고 **보험회사의 Non-OEM부품 적용**에 대한 구속력 있는 지침을 마련
- 소비자가 Non-OEM부품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자기인증제 대상 부품을 확대하거나 별도의 부품인증제도를 도입
- 외제차 부품가격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통해 부품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적극적 감시권을 보장해야 함.

- 이 밖에도 독립정비업체의 OEM부품이나 정비기술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**제공대상 정비기술정보 범위 및 제공방식, 제공기술정보의 가격산정 원칙, 정비기술정보 제공의 법제화나 시장자율규제 여부**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음.

대체부품의 민간품질인증제도 도입과 보험수리 사용 촉진 필요

- 두 번째 주제인 「자동차부품시장 경쟁촉진방안」은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이상돈 팀장이 발표하였음.
 - 자동차보험 수리비 중 국산차의 전체 수리비 대비 부품비 비중은 42.5%이나, 외제차의 경우 60%로 더 높으며, 건수 기준으로는 5.8%에 불과한 외제차 부품비가 금액 기준으로는 전체 부품비의 22.8%를 차지하는 실정으로 외제차 부품비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음.
- 이상돈 팀장은 부품비용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**OEM 부품과 대체부품의 시장경쟁 유도**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, 특히 대체부품에 대한 **민간품질인증제도 도입**과 대체부품 수요창출을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음.
 - 미국 및 유럽의 품질인증제도 사례를 소개하면서 국내 환경에 맞는 **사용자 중심의 품질인증제도 개발**이 필요하며, 보수용 부품의 최대 사용자인 **보험업계가 그 중심 역할**을 수행해야 함.
 - 보수용 부품의 대부분을 소비하는 **보험수리작업에 대체부품 사용**이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며, 자동차 수리작업의 주체인 정비업

계와 보험업계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소비자에 대한 신뢰 제공과 품질보증에 대한 연대 책임을 져야함.

- 주제발표 후 관련 주제에 대해 윤진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장 등 8명의 토론과 청중들의 질의응답이 진행되었음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http://www.kiri.or.kr>